



| | |
|------|-----------------------------------|
| 수신 | 각 언론사 과학, 노동, 사회부 담당 기자 등 |
| 발신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
| 연락처 | 담당: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
| 배포일시 | 2024년 11월 10일 9시 |
| 제목 | 충북TP 노사관계 파탄 책임 충북도를 규탄한다! |

충북TP 노사관계 파탄 책임 충북도를 규탄한다!

- 충북도는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라!

우리 노동조합은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1월 7일 충북TP 담당과인 충청북도 과학기술정책과(이하 충북도)가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한 '충북TP 임금협상(안) 이행촉구 관련 향후 계획'이란 자료를 입수했다.

배포한 자료에서 충북도는 '2024년 기본연봉 인상률 6.25%* 제시와 클린아이**에 공시된 2023년 평균임금 전체 TP중 5위'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충북TP와 협의 예정이라고 했다.

* 행안부 기준인상률 3.9% + 물가상승 보전분 0.55% +직급보조비 4개월분 1.80%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그러나 정작 협의 예정 대상인 충북 TP 구성원들은 6.25%라는 숫자를 보도에서 처음 접했다. 체결식이 무산된 후 충북TP사측은 충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해 노조에 단 한번도 협상을 제시한 적이 없다. 충북TP 노사가 듣도 보도 못한 6.25% 언급은 충북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인 충북TP의 임금협약에 명백히 개입해 배후조정 중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충북도는 노사 자율 교섭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6.25%와 전체 5위라는 숫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미 많이 받고 있으면서 더 받으려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충북 TP 구성원들을 낙인찍고 있다. 충북도는 단순히 클린아이에 올라온 인건비 금액을 현원으로 나눠

1인당 금액을 계산했다. 또한 전국 18개 TP 중 5위라고 했지만 일부 기관이 누락되어 있거나 계산 방식의 문제 등 통계 자체도 신뢰하기 어렵다.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자료 시스템) 자료

| 테크노파크 | 2023년 인건비(클린아이) | 순위 | 인원(명) | 평균 인건비 | 평균 인건비 순위 |
|-------|-----------------|----|--------|------------|-----------|
| 강원 | 12,107,844,040 | 10 | 157 | 77,120,025 | 6 |
| 경기 | 9,953,172,188 | 14 | 132.17 | 75,305,834 | 9 |
| 경기대진 | 4,775,752,187 | 17 | 75.16 | 63,541,141 | 14 |
| 경남 | 16,574,319,978 | 3 | 258 | 64,241,550 | 13 |
| 경북 | 14,711,493,171 | 4 | 185.58 | 79,273,052 | 4 |
| 광주 | 11,064,399,000 | 12 | 137 | 80,762,036 | 2 |
| 대구 | 17,709,049,366 | 2 | 241 | 73,481,532 | 10 |
| 대전 | 14,528,524,540 | 5 | 165.42 | 87,828,101 | 1 |
| 부산 | 5,125,121,551 | 16 | 269 | 19,052,496 | 17 |
| 세종 | 6,860,964,480 | 15 | 90 | 76,232,938 | 7 |
| 서울 | | | | | |
| 울산 | 14,319,159,338 | 6 | 188.24 | 76,068,632 | 8 |
| 인천 | 22,030,014,860 | 1 | 355.34 | 61,997,002 | 15 |
| 전남 | 13,079,933,486 | 8 | 180 | 72,666,297 | 11 |
| 전북 | 11,409,210,155 | 11 | 159.5 | 71,531,098 | 12 |
| 제주 | 10,242,890,380 | 13 | 209 | 49,009,044 | 16 |
| 충남 | 13,133,852,758 | 7 | 165 | 79,599,107 | 3 |
| 충북 | 12,691,296,000 | 9 | 162.66 | 78,023,459 | 5 |
| 포항 | 470,678,869 | 18 | 91 | 5,172,295 | 18 |

경영공시
주요통계
참여소통
클린아이소개

홈 > 경영공시 > 기관별공시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출연기관
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

재무현황
예산결산
공시항목정보

충북테크노파크

경북공시항목 > 재무현황 > 예산결산

예산결산문로드

예산결산

기준일 : 2023.12.31 (단위 : 원)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인건비 | 10,403,083,110 | 10,056,616,000 | 11,172,407,000 | 12,529,691,000 | 12,691,296,000 |
| 경상경비 | 6,406,795,446 | 5,780,188,299 | 8,098,508,198 | 9,018,267,112 | 9,373,681,212 |
| 사업비 | 60,228,302,659 | 86,495,174,812 | 76,116,698,492 | 83,444,192,948 | 105,488,178,516 |
| 기타(예비비 등) | 2,528,009,439 | 2,154,225,082 | 1,945,398,808 | 1,824,917,868 | 1,260,406,262 |
| 계 | 79,566,190,654 | 104,486,204,193 | 97,333,012,498 | 106,817,068,928 | 128,813,561,990 |

<직급별 임금 등 자세한 자료를 알 수 없는 클린아이>

충북도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충북 TP와 사전 협의 없는 충북도의 자료를 배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충북도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충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결정하고 협의한 2024년 기본연봉 인상률은 충북TP 이사회에 심의 추진한다’라는 것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노동3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충북도는 타기관과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공무원들과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충북도의 경우, 공무원들은 직급보조비를 이미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에는 직급보조비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번 충북 TP 임금 협약 체결이 중단된 배경에는 충북도가 직급보조비 신설을 불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충북TP 노사가 올해 임금 요구(안)에 직급보조비 신설을 한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위 직급 노동자의 지속적인 이직이 발생 중이라 심각한 기관 내 임금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는 공여지책이었다. 6급 최하위 직급과 1급 최상위 직급 사이 10만원, 직급 당 약 2만원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 수준으로 설계해 하후상박의 기초를 유지했다. 참고로 충북도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8, 9급 최하위 직급과 1급 최상위 직급 간의 차이가 4배로 600,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충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 사실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번 충북도의 입장발표로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하는 충북도의 태도가 만천하에 드러나 충북 TP 구성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마음은 처참하다. 자신들은 몇십만원씩의 직급보조비를 받아 가고 있으면서, 충청북도의 산업 전략을 육성하고, 정책기획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평균 월 10만원 인상(안)을 요구한 것에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는 더 이상 충북 TP 종사자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충북TP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충북TP 임금협약을 막고 있는 배후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졌다. 충북 TP를 관리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충북도와 김영환 지사, 그리고 그 그늘에 숨어 있는 충북TP 오원근 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상처 입은 충북 TP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노조는 충북도가 충북TP 노사 관계 개입을 중단하고 지자체 본연의 책무에 전념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도의 개입으로 중단된 임금 협약 중단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충북도는 더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년 11월 9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